

열린세상



정진탄
뉴미디어본부장 겸 논설위원

얼마 전, 한 노신사로부터 따끔한 지적을 받았다. 지방언론, 특히 지방신문 오피니언란을 보면 읽을 만한 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했다. 칼럼과 기고문 등에서 스케일이 있고, 뭔가 아우르면서 동시에 공감과 감동을 주는 글이 별로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한마디로 “촌스러우니 그렇지요.”라고 답했다. 지방신문 종사자와 기고하는 분들에게는 참으로 죄송하지만 일정 부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역으로 종사하고 있는 필자가 사실 자주 느끼는 부분이지만 이에 대한 직방약이 없어 고민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시장규모 작아 지방신문 험로

원인이야 찾으면 많이 있을 것인 바, 크게는 지역균형발전이 터덕대 호남 경제 규모가 그만 그만하고, 지방신문의 재정구조가 이에 기인해 열악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파위 있는 신문이 존재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광고시장이 작고, 이 작은 파이를 여러 지방신문이 나눠 가져야 할 판이어서 당장은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예전에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이라고 해서 언론의 자유를 말했고, 그 뒤 자본으로부터 독립을 외쳤는데 이제는 현실성 없는 이상적인 케이스다. 자본으로부터 독립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으로의 대대적인 종속을 바란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그저 그 자본이 상대적으로 작하고 순수한 것이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지역 '명품 오피니언 리더' 어디 있나

솔직한 심정일 것 같다. 지역경제가 괄목하게 발전하지 못하고 이에 따른 수익창출 시장의 협소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 자본이 생기지 않으면 지방신문 퀄리티는 부실해지기 십상이다. 이는 곧바로 기호가 다양한 독자들의 외면으로 이어지고 악순환이 반복된다. 모던한 독자들이 얼마나 매섭고 비판적인데 알음알음으로 신문 하나 봐줘, 해가지고선 신문사를 운영해 갈 수 있겠는가. 이런 웅색한 판에 퀄리티 있는 명칼럼이나 명기고문을 올릴 능력이 있는 지방신문이 얼마나 있을 수 있겠나.

좋은 필진을 모시려면 그에 합당한 대우가 필수적이며, 먼저 퀄리티 있는 피피퍼를 발행해야 하거나 취약한 생선 기반이 발목을 잡는다. 피피퍼에 보이는 글이 대체로 무미건조하고 비판성이 떨어지는 글이 다수를 이루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사회적 안목, 삶의 지혜, 시정 및 도정에 대한 직책, 정책 대안 제시, 때에 따라선 독특한 호평 등의 다채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경연이 필요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는 지방신문의 발전이나, 아니냐의 문제를 넘어 지역발전의 논의 장이 활성화하지 못함에 따라 지역민에게도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지방신문은 감히 비교하면 미국의 동부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서부의 로스앤젤레스타임스처럼 권역지로서의 기능이 없다. 그러니까 서울·수도권의 신문, 영남지역의 신문, 호남지역의 신문이라고 해서 어깨를 견주는 게 아니라 중앙과 지방이란 지독한 카테고리 속에서 지방신문은 허우적대며 맥을 못 춘다.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언론의 균형도 맞춰가야 함을 웅변한다.

지방신문으로서의 외부환경 탄탄을 할 게 아니라 내부의 자정과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통해 발전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여야겠다. 언제부터인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중앙과 지방의 대비 속에서 자신도 모

르게 움츠러든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지방신문 종사자 모두 새해에는 심기일전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쩔지 모르겠다.

이왕 말 나온 김에 지방신문에서 글쓰기는 참으로 쉽지 않다는 이유를 경제적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내부 분위기 속에서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비판적 글쓰기는 터부시하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 인신공격이 아니라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마저 잘 되지 않는 회한한 상황을 왕왕 보거나 느낄 때가 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지역사회의 면적이 좁고, 소위 한 다리 건너면 모두 알 수 있다는 밀접한 관계망 때문이 아닌가 한다.

또 지적과 비판에 대해 받아들이는 지역민의 포용력 내지는 수용력이 생각보다 깊지 않음을 지적할 수 있겠다. 괜히 굵어 부스럼 만드는 글을 써 불편해지는 상황을 애초에 피하고 싶은 것이다. 어떤 거래 속에서, 좋은 게 좋은 식의 연장에서, 비판 수위를 높이는 글을 꺾는 것이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지역 내에 비판적 글쓰기를 하는 인물과 능력이 많지 않다는 데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비판적 글쓰기' 토대 구축을

이유야 어떻든 매일매일 신문은 나오고, 오피니언란은 펼쳐지고, 눈길을 주는 독자가 있기 때문에 질적 성숙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지역 사회 발전 논의구조를 담당하는 몫이 크게는 지방언론, 지방신문에게 있다면 대변화를 모색해야 하고 자기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야 지역발전의 기틀을 굳건히 할 수 있다고 본다.

독자들 또한 중앙 예측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주변 환경에 보다 더 주목하고 이를 반영하는 지방신문에 더욱 관심을 가지기를 바라며, 때로는 따끔한 비판과 질정을 아끼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초고령사회 대비한 남도 식품산업 전략

구의 46.4%를 차지해 0-14세 유소년 인구(7.5%)의 6배를 넘어선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경우를 고령사회, 14% 이상인 경우를 고령사회,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이미 고령화 사회를 거쳐, 2018년 고령사회로, 2026년에 초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나타날 수 있는 지방소멸위험도를 분석한 '지방소멸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10곳 중 4곳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소멸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전국 및 16개 광역시도별 소멸위험지수 조사 비교표(2018년)에 의하면 전남지역은 전국적으로 소멸위험지수가 제일 낮아(0.47), 전남지역의 거의 모든 군에서 전국평균(0.91)보다 약 2배이상 빠른 소멸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진행되고 활동량이 감소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치아의 씹는 능력과 장의 연하능력 저하로 소화능력이 떨어져서 음식 섭취량과 영양공급이 불균형에 이르게 된다. 노년기의 부실한 식사 관리는 단순한 영양실조 뿐만 아니라 생활습관병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으로 연결되어 결국 삶의 질을 현격히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고령자의 건강한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서는 생활의 자립도와 건강 수준에 맞는 식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향후 10년 안에 '개인 맞춤식 영양'이라는 개념이 확산되면서 유전체학,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 인체 장기 생리학 등이 임상영양학과 융합될 것이다. 소위 '영양유전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유전체 정보기반의 DNA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식단을 짜고 개인별 건강 상태를 고려한 식이방향을 제공하면 이른바 '의료용 식품' 시장이 확대돼 개인별 건강상태, 식습관, 기호도 등에 따라서 섭취해야 할 과일, 야채, 육류의 종류와 섭취량은 물론 섭취해야 할 시간 등을 의약품처럼 처방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친숙한 '남도'란 단어를 음식과 연관지어 생각 해 보면 누구나 전남을 떠올리게 된다. '풍류남도 남도음식'이란 단어에서 남도음식을 떠올리게 할 만큼 전남남도에는 다양한 맛이 존재한다. 기름진 호남평야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먹거리는 풍족하고 다양한 남도의 발효식품화를 발전시켰다.

남도음식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 지역을 대표하는 남도음식으로는 담양떡갈비, 영광굴비, 나주곰탕 순으로 인지도가 높았고 "이 야기가 있는 남도음식을 먹어 보고 싶다"는 것으로 보아 남도음식에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화순에 곧 착공 예정인 '기능성 HMR(간편식) 실증실용화센터'는 '풍류남도' 남도의 풍부하고 친환경적인 천연의 특산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남도의 미각을 새롭게 구현하는 전남 푸드테크의 산실이 될 것이다.

시설

'군공항 이전' 지자체 간 갈등 안된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돌출변수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성숙한 대응이 요구된다. 지난해 11월 함평군에서 군 공항 이전 설명회를 요청해 열린 이후 인접군인 영광군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모습이다. 더욱이 함평군 일각에서는 광주시 행정구역 편입 가능성을 제기해 파장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는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지만 군민 간의 갈등, 지자체 간 충돌로 비화할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영광군 연산면정년회가 함평 주민설명회에 대응하는 선언문을 내고 "영광에서도 군 공항 이전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군 공항이함평으로 이전하면 함평만 이익을 얻게 되고, 영광은 고스란히 피해만 입는다"며 "차라리 발상의 전환을 통해 영광도 바닷가와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군 공항 이전에 대한 능동적인 입장을 취하자"고 했다. 알려진 것처럼 만일 함평 손불면으로 군 공항 이전이 검토될 경우, 경계를 이룬 연산면은 아무런 실익 없이

피해만 입게 된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다시 말해 연산면정년회의 주민설명회 요청은 순수하게 군 공항 이전을 생각해보자는 의미라기보다는 함평 주민설명회에 대한 맞불 성격이 큰 것으로, 군 공항 이전 설명회가 지자체 간, 현지 주민 간 갈등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 영광군 의회를 중심으로 함평지역의 군 공항 유치 움직임에 대해 미래 피해를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덧붙여 군 공항 이전을 조기에 결정할 대구시 군위구처럼 함평지역에서 광주시로의 행정구역 편입을 거론하는 주장이 나오면서 상황이 견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번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남지역이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작업과 관련해 혼란에 빠지거나 이웃 간 적을 지는 일이 없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군 공항 이전은 정치권 특별법 제정과 범정부협의체 활동 등의 로드맵에 따라 해결책이 모색되고 질서 있게 이뤄져야 한다.

전남 지형 바꿀 테슬라 유치전 성과 냈으면

전남도가 세계적 빅테크 기업 테슬라 유치전에 뛰어 들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테슬라 기가팩토리 아시아 제2공장 투자 유치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성과를 냈지 주목된다.

유치전을 본격화한 전남도는 재생에너지 생산량,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 등 테슬라 유치의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전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용량은 11.8GW로 전체(20.6GW)의 53.7%를 차지한다. 앞으로 신안 8.2GW 발전단지를 포함해 총 계획용량 30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전국 최대 재생에너지 공급 규모로 RE100을 선언한 글로벌기업의 구미를 당기기 충분하다. 또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연간 2,000만톤 철강 원자재와 친환경 자동차용 초강도 경량강판 기가스틸 생산, 이차전지 소재 공급망과 연계된 배터리(셀) 인프라도 강점이다. 광주기아자동차와 글로벌모터스, 영광 세보모빌리티 등 3개의 완성차 업체가 있고, 연간 90만대의 자동차 선적이 가능한 5만톤급 4개

선석을 갖춘 광양항과 연 30만대의 자동차를 선적할 수 있는 목포신항만의 전용부두도 아시아의 새로운 생산 거점으로 손색없다. 특히 테슬라가 필요로 하는 100만~130만㎡의 부지를 확보해 적기 착공이 가능한 점,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등의 맞춤형 전문 인력도 비교우위다.

테슬라 유치전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화상면담에서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이후 전국 17개 시도 35개 도시가 뛰어 들었다. 테슬라 전기차 공장은 현재 최대 200만대까지 생산이 가능해 현대차 울산 공장 160만대를 능가한다. 어마어마한 파급효과 탓에 지자체들은 정·관·재계 라인을 총동원하는 등 사활을 걸고 있다. 광양 세풍산업단지 여수 울촌 융복합물류단지,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 등 3곳이 뛰어든 전남 역시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전남이 산업지형을 단박에 바꾸고 소멸위기를 뛰어넘을 호재인 테슬라 유치에 성과를 내길 응원한다.

기고



연운열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장

200여년 전 '인구론'이라는 책을 썼던 토머스 맬서스(Thomas Malthus)는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성공회 성직자였다. 그는 인간의 삶을 운명하게 지명하는 후생(welfare)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나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인구 증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후생을 사회 구성원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 지난 7월 UN은 '2022년 세계인구 전망보고서'에서 세계인구는 79억4,200만 명이며 지난날 11월 중순에는 8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통계청은 한국의 총인구가 지난해 5,173만8,000명으로 2020년 5,182만9,000명에서 0.2%(9만1,000명) 줄었다고 발표했다.

가장 최근의 트렌드가 반영된 지난해 인구 추계에서 한국은 2020년에 인구증가 정점을 찍고 2070년 3,766만 명으로 1,400만 명 이상 감소한다. 약 50년 뒤 한국의 인구는 경기도에 해당하는 인구(1,358만 명)가 사라지는 셈이다. 그만큼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고 심각하다는 뜻이다. 207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

정부, 새 교육과정에 5·18 포함시켜야

기지수첩



황애란

사회부 부장대우

교육부가 '2022 개정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삭제한 것에 대해 광주전남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교과에서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 역사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의 서술을 최소화했다"고 해명에 나섰다. 정치 정점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5·18을 바라보는 현 정부와 교육 당국의 전박한 역사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고 규탄하며 2022 개정교육과정 성취기준 해설에 5·18민주화운동을 명시해 줄 것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강력 요청했다. 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은 5·18민주화운동의

가치 훼손과 민주주의 교육 약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5·18 민주화 운동'은 2004년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 내용 요소로 처음 포함됐고, 2015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는 '성취기준'에 포함됐다.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마련한 교육과정에서도 5·18 민주화 운동은 4·19 혁명, 6월 민주항쟁과 함께 총 7회 기술됐다.

지역 교육계와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1년 중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5·18이 삭제됐던 것을 지역사회가 봉처 바로잡은 경험을 되살려 교육부의 5·18 용어 삭제 철회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오는 18일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해 기타 안건으로 교육부의 5·18 용어 삭제 철회를 건의할 계획이다. 5·18 전국화·세계화 교육을 강화하고 집필되는 역사 교과서에 5·18민주화운동이 명확하게 표기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5·18은 결코 빠질 수 없는 사실이다.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바른 역사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이다.

지역민들은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용어 삭제를 냉철하게 보고 있다. 논란이 더 확산하기 전에 교육당국은 5·18이 교육과정에 다시 명시되어 초·중·고 교과서에 실릴 수 있는 합당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Jeonnam Daily (전남매일), including phone numbers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editorial, circulation, and advertising.

Advertisement for Jeonnam Daily (전남매일) featuring a search bar and the slogan '정직한 신문, 공정한 신문' (Honest newspaper, fair newspaper).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